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14. 2. 14 (금)

안전행정부

목 차

Ⅰ. 기관 현황 ····· 1

Ⅱ. 2013년 성과와 평가 ····· 7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 15

1. 현장중심의 안전 실천 ····· 18

2.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 28

3.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 37

Ⅳ. 주요 정책 현안 ····· 47

Ⅴ. 추진 일정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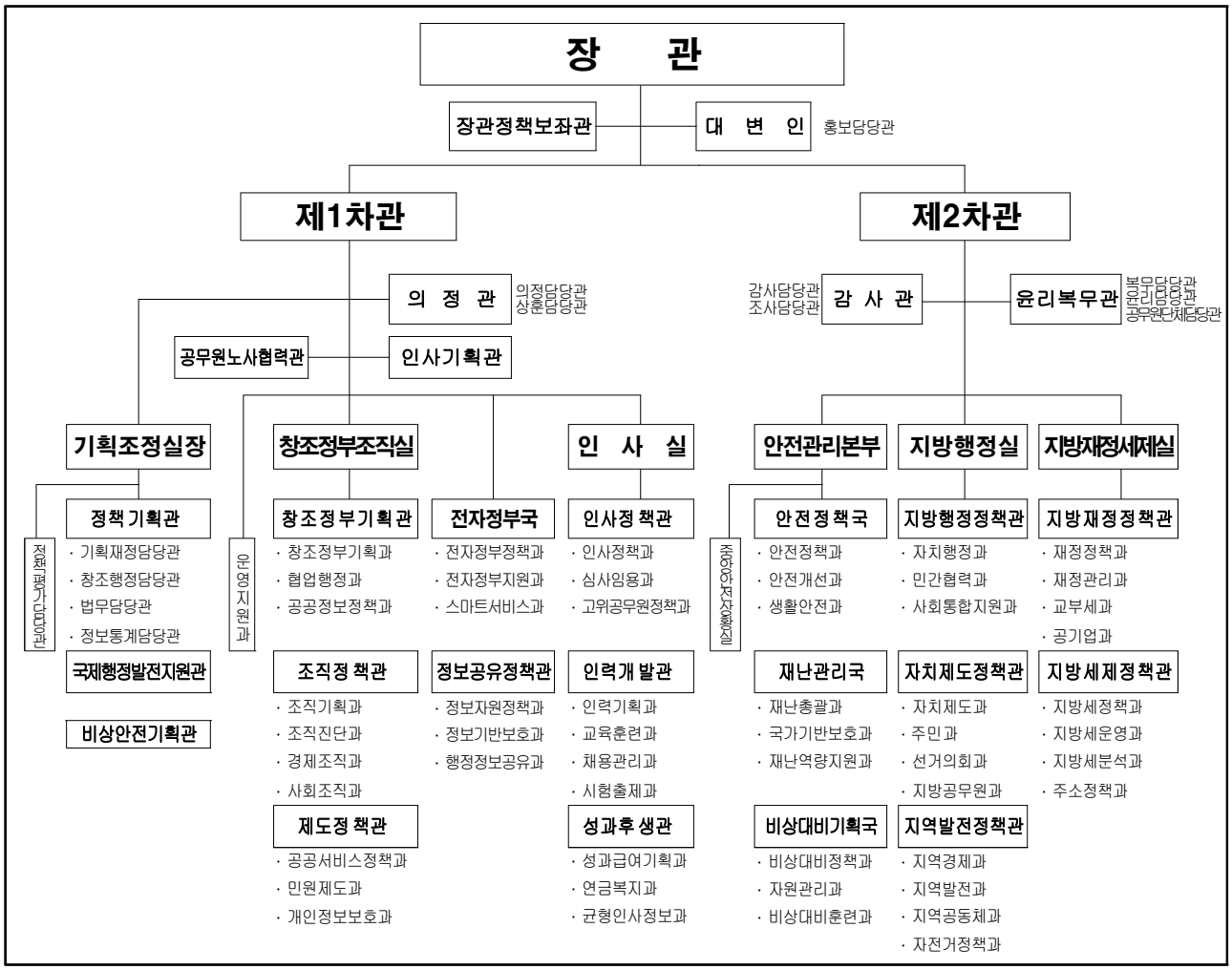
[참고] 주요정책 개념체계도 ····· 61

Ⅰ.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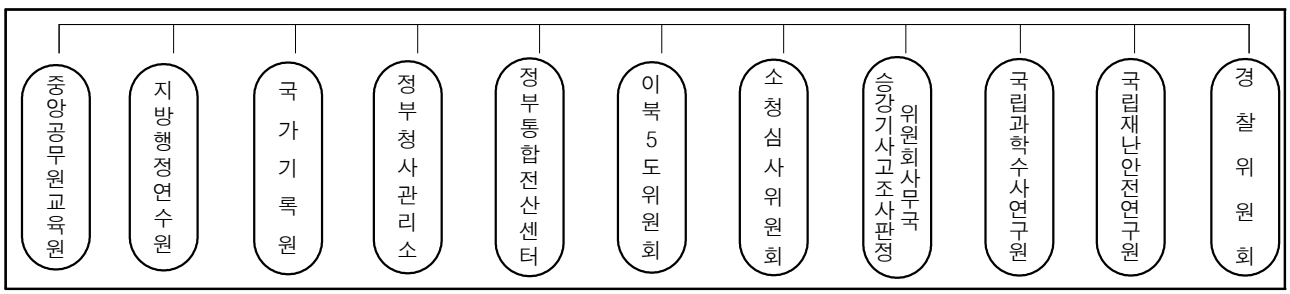
1 기구 및 정원

□ 기구

○ 본부 : 2차관, 1본부, 5실, 4국, 21관, 69과 / 소속 : 11개 기관



○ 소속 : 11개 기관



□ **정원** : 총 3,232명(본부 1,187명, 소속기관 2,033명, 전직대통령비서관 12명)

2 주요기능 및 소관 법률 · 예산

□ 주요 기능

안전관리	▪ 안전정책 총괄·조정 ▪ 재난대응 총괄 및 제도 정비	▪ 생활안전 개선·안전문화 ▪ 비상대비 정책 총괄·조정
정부운영	▪ 정부 3.0 추진 ▪ 공무원 인사제도 ▪ 의전·국가상징·기록물·청사	▪ 정부조직 및 정원 관리 ▪ 연금·윤리·노사·복무 제도 ▪ 전자정부·개인정보보호
지방행정	▪ 지방행정 지원 ▪ 지방재정·세제	▪ 지방자치제도 ▪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 기타 정부 서무 업무, 다른 부처에 속하지 않는 사무(법령·조약의 공포 등)

□ 소관 법률 : 142개(국가전체 1,366개의 10.4%)

○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 '14년도 예산 : 40조 3,53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총 계	**403,538**	
□ 일 반 회 계	**399,894**	○ **본부집행 : 39,293(9.7%)** ○ **지방지원 : 364,245(90.3%)** – 지방교부세 : 356,982 – 국고보조금 : 7,263
○ 기본적 경비	**2,811**	
– 인 건 비	2,437	
– 기본경비	374	
○ 지방교부세	**356,982**	
○ 국가부담금	**26,508**	
○ 사 업 비	**13,593**	
□ 특 별 회 계	**3,64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1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463	

3 지방자치단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 수 : 총 244개

○ 광역자치단체(17) : 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

○ 기초자치단체(227) : 시 75, 군 83, 자치구 69

※ 행정시 2개, 일반구 33개, 읍면동 3,487개(읍 216, 면 1,198, 동 2,073)

□ 지방의원 수 : 총 3,731명

○ 시·도 의원 : 855명 (비례 82명 포함)

○ 시·군·구 의원 : 2,876명 (비례 375명 포함)

□ 지방공무원 정원 : 총 290,066명 (시·도교육청 제외)

○ 시·도 : 87,151명 (국가직 82명 포함)

○ 시·군·구 : 202,915명

※ 안행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사 관리의 기준 제시 등 총괄·조정 역할

□ 2014년도 재정규모(잠정) : 총 148.3조원 (통합재정수입 기준)

○ 일반회계 128.2조원(86.4%), 특별회계 18.5조원(12.5%), 기금 1.6조원(1.1%)

○ 시·도 97.2조원(65.5%), 시·군·구 51.1조원(34.5%)

□ 2014년도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잠정) : 평균 45.0%* ('13년 51.1%)

* 세외수입 과목개편 전 기준 적용시 50.3%

○ 전국 최고 : 80.4% (서울 본청)

○ 전국 최저 : 3.9% (경북 영양군)

Ⅱ. 2013년 성과와 평가

1 2013년 성과와 평가

안전행정부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

《 안전한 사회 》

◇ 국민안전종합대책 마련 등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안전의 기본 틀을 다짐

◇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4대 사회악 감축목표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안전 분야 전반에서 나타남

□ 국민안전을 위한 종체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 '추진체계 마련-종합대책 수립-제도정비' 등 범국가 차원의 총체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민안전종합대책」등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5월)
- 범정부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운영
  ※ 안전정책조정회의 10회,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75회 개최

○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안전책임관 지정, 지자체 안전전담부서 설치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발족(5월), 안전실천과제 캠페인 실시

□ 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 안전 관련 법률 개정

- 4대 사회악 근절, 통학차량, 체험캠프 등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 성폭력방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도로교통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개정

□ 사고사망자 감소 및 4대 사회악 감축목표 달성

○ 교통사고·산업재해·해양사고 등 안전분야 전반에서 사망자 감소

- 지난 50년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10명이 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
- 풍수해·대설 재산피해가 지난 10년 평균 대비 1/10로 감소

※ 지난 10년간 평균 피해액 1조 4,384억원 → '13년 피해액 1,565억원

구분	교통사고	산업재해	수난	해양사고	풍수해	승강기	폭염	화재
'12년	5,392	1,041	218	272	16	12	15	267
'13년	5,080	975	171	199	4	7	14	307
증 감	**△312**	**△66**	**△47**	**△73**	**△12**	**△5**	**△1**	**40**

○ 당초 계획했던 4대 사회악 감축목표 초과 달성, '12년 대비 크게 개선

구분	2012년	2013년
성폭력범 미검거율	15.5%	11.1%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9.6%	2.1%

구분	2012년	2013년
가정폭력 재범률	32.2%	11.8%
식품안전 체감도	66.6%	72.2%

【 보완 · 발전방향 】

○ 수치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체감도는 낮은 상황

- 특히, 30~50대 여성의 안전 체감도가 낮음

※ 정책만족도 조사(11월) : 안전정책 인지도 ('12년) 60% → ('13년) 69%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 '안전하다' 비율 (7월) 24.2% → (12월) 29.8%
※ 여성의 '안전하다' 비율 : 30대 15.5%, 40대 21.5%, 50대 17.1%

○ 일선 현장까지 안전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

- 청소년캠프(7월), 노량진 수몰사고(7월), KTX사고(8월), 헬기충돌(11월)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체감형 안전정책을 추진

《 유능한 정부 》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비전과 철학을 정부 내에 확산시키고 추진기반을 마련

◇ 공개와 협업의 분야별 성공사례 도출

□ 국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 추진기반 확립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확정('13.6월)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정보공개법 개정, 공공데이터법 제정,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법·제도와 시스템 토대 마련

○ 비전 선포('13.6.19) 이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단기간에 범정부적으로 확산

※ 중앙·지방·공공기관 대상 정부3.0 교육 실시(약 58만명), 정부3.0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1,400여건 발굴('13.12월) 등

□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는 분야별 성공사례 창출

○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 85,000여건의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 제고

※ 유치원 학부모 실제 부담금(교육부), 중고차 종합이력정보(국토부) 등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0여종 공공데이터 개방

※ 스마트 택배 앱(국내 우편물 조회서비스 활용, 130만건 다운로드), 여행노트 앱(국문 관광정보서비스 활용, 15만건 다운로드) 등

○ **(서비스 정부)** 통합형 민원 서비스 및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24' 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13.12월)

- 우체국 집배원 활용 농어촌 취약계층 대상 민원·복지서비스 제공 등

○ **(유능한 정부)** 협업형 업무모델 제시 및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

- 중앙·지방 등 여러 기관이 연관된 현장단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14.1월, 구미 등 6개), 고용·복지 종합센터('14.1월, 남양주) 등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관간 330개 정보공유·연계 과제 발굴

※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청력 정보 연계(연 300만명이 검사비용 등 161억원 혜택)

□ 협업 촉진과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는 인사 구현

○ 통합정원제 운영, 인사교류 활성화 등 협업 중심으로 인사 운영 개선

※ 통합정원 재배치(626명) 및 인력감축(1,042명, '13.12월 기준)

※ 인사교류 직위 대폭 확대(283개 → 690개) 및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제공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설로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뒷받침

○ 지역인재·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

【 보완 · 발전방향 】

○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부족

- 공무원 시각,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공개에 소극적
- 정부3.0 가치가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등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함

○ 지자체·공공기관 등 국민 접점기관의 실천 저조, 국민 인지도는 낮음

-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기관 55개(19%)
- 정부3.0 인지도('13.11월) : 국민 34%, 공무원 99.5%, 전문가 92%

⇨ 기초적인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고, 정부3.0의 구체적 성과를 확산

《 성숙한 자치 》

◇ 지방의 민생·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재정비
◇ 지방재정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공개 확대

□ 민생 · 복지 중심의 지방행정 기능 강화

○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복지·소방인력 보강
※ '13년도 사회복지인력 1,505명, 소방인력 838명 확충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 개선

○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를 통한 행정사 자격취득 국민 개방

○ 생활자치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31개) 시범실시

□ 지방 자주재원 확충 기반 마련

○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 → 11%),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5%p 인상('13년 평균 49% → '14년 64%)

○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 현행 유지('15년 0.3조)

○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일몰 대상액 7,781억 중 2,726억 축소)

○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을 제정하여 세외수입 관리 강화('15년부터 약 1.1조 확충)

□ 지방 지출관리 강화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

○ 투자심사 확대(2천억미만 민자사업 추가), 격차 심한 행정경비(5종) 한도 설정

○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 재난안전·서민생활에 재투자(약 3,300억)

○ 지역행사·축제의 원가공개(총 1,744건, 5,836억원)

○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공시(66 → 84건) 및 안행부 통합공시 항목 확대(9 → 17건)

□ 동네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101개 법령 및 790개 조례·규칙 개선 추진

○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 마을기업 1,162개 운영, 8,000여개 일자리 창출

○ 생활물가 공개, 착한가격 업소 등을 통해 주민 체감물가 관리

※ 30개 품목(지방공공요금 7, 개인서비스요금 13, 농축산물 10)

○ 도서·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 추진(139건, 1,635억원)

□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으로 효율적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5월)

○ 국정과제 중심의 시·도 부단체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 확산을 통한 지방 경쟁력 제고

※ 즉시 성과창출이 가능한 60개 선도과제 선정(9월) 및 전국확산 지원

【 보완 · 발전방향 】

○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공기업 부채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

※ 지방공기업 부채 추이 : ('10년) 62.9조 → ('12년) 72.5조

○ 지자체는 일할 수 있는 법·제도·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호소

⇨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필요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4년 정책 비전과 목표

“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안전 실천

-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정착
- 근원적 안전위협요인 제거
-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
-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 국민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 한번에 받는 맞춤형 서비스 정착
- 한 발 앞서가는 세계 1위 전자정부 실현
- 정부청사의 공간적 거리를 디지털 행정으로 극복
-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주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선6기 출범 지원

【 안전한 사회 분야 】

현장에서 실천되는
체감형 안전정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1 어린이와 여성 안전 확보 (국정과제 74~77, 83)

2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국정과제 83)

3 근원적 안전위협요인 제거 (국정과제 83)

4 안전문화 정착 (국정과제 83)

5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1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중점 추진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대응

※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 '12년 4.3명→'14년 3명→'17년 2명대
- 외국의 경우('10년) : 영국 2.5명, 독일 2.6명, 프랑스 3.5명 등

○ 유치원·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 준수 및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새롭게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분석, 연령별·활동 공간별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사고 잦은 어린이 통학로 등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시설 정비·확충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

○ 가정방문 서비스 유형별 안전대책으로 여성·주부의 불안감 해소

- (택배) 공공장소 무인택배함 설치 및 지인간 택배 전달 활성화
- (검침) 방문 사전안내 활성화 및 여성 자원봉사자 동행검침 추진
- (수리·배달) 방문직원 사진 사전 전송 및 사후 안심콜 서비스 검토

○ '여성 안심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원룸건물 방범인증제,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등 추진

※ 현재 전국 2,600여개의 여성 안심귀갓길 선정(정류소·역 ~ 주거지)

□ 성 · 학교 ·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없어질 때까지 역량 결집

○ 시행 첫해 초과 달성한 4대 사회악 감축목표를 상향 재설정하고, 전담수사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 관리

※ '17년 : 성폭력범 미검거율 9.1%, 가정폭력 재범률 10.4%,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1.7%

○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추진

참고 여성안심귀갓길 · 가정방문서비스 대책

□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위주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 범죄발생·지역특성·방범시설·주민요구 등 치안여건을 다각도로 분석, 정류소·역에서 주거지까지 골목길 위주 「안심귀갓길」 책정

※ 관서별 치안수요를 고려, 1급지는 2~4개, 2급지는 1~3개, 3급지는 자율 선정

○ 「안심귀갓길」內 순찰강화는 물론, 환경개선·대국민홍보 병행 추진

- 경찰력과 협력방범단체 등 인력을 집중, 가시적 순찰 강화
- 보안등·CCTV·벽화 등 환경개선 및 스마트 첨단 방범시스템 등 도입

■ **안심귀갓길 도보자 네비게이션** : CCTV·보안등·편의점 등이 위치한 안심귀갓길로 안내하는 도보자용 네비게이션 개발 추진 중

■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 스마트폰 앱을 활용, 택시 내에 부착된 태그를 터치하면 택시정보, 승·하차 시간, 경로 등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송신

□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택배,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차단 대책을 마련

○ (택배) 지자체별 공공장소 무인택배함 설치, 지인간 택배전달 활성화 등

- 주민 공동 이용공간, 거주지 인근 지역에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를 유도하고, 이웃 주민들(고령퇴직자 등)이 택배를 전달하는 사업 활성화

* (서울) 21개 자치구 50개소 대상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운영('13.6월~)

(부산) 택배회사가 고령은퇴자 등 입주민들에게 가구당 택배 전달 조건으로 건당 600여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안심이 택배' 사업 시행('13.1월~)

○ (검침) 방문 사전안내 활성화 및 동행검침 모델 검토

- 가스·전기 등 공공 기관은 방문 사전안내 활성화 및 주민대상 홍보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시,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일정 사전안내(산업부, '13.6월~)

- 검침기관 및 지자체 협약으로 여성 자원봉사자 동행 검침 추진

2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정착

◇ 안전에 대한 개선의지가 구현되고 각종 안전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Golden Time)」 실시

○ 재난발생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동·도착 한계시간을 설정·운영

※ (예시) 화재 : 소방출동 지령 후 5분 이내 / 산불 : 신고접수 후 헬기 30분 이내

※ 화재시 5분 이내 도착률 제고 : '13년 58% → '14년 62% → '17년 74%

○ 긴급차량의 출동 속도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투자와 범국민 협력 제고

- 긴급차량의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설치 등 시설 투자
- 주택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소방차 길터주기 및 양보운전 집중홍보 전개, 의용소방대 출동율 향상 등

□ 현장의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안심마을」(10개소) 사업 본격 추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급경사길 안전난간 설치 등 주민 스스로 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생활시책 추진

○ '14년 지자체 합동평가시 선제적·예방적 지표를 보강하여 개편

○ 안전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안전지수*」와 「지자체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과학적으로 관리

*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재난 피해액 등이 망라된 종합지표로 국제적으로도 비교 가능한 지수로 활용

○ 「생활안전지도」는 상반기에 15개 지자체 시범 제공하고, 하반기에 100여개 지자체로 확산

참고 재난관리「골든타임제」실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골든타임제(Golden Time)**」를 추진

□ 주요내용

5분이내 화재현장 도착률 : '13년 58% → '14년 62% → '17년 74%

○ (**화재**) 소방출동지령 후 **5분 이내** 초기 대응
-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홍보강화 및 교통신호체계·시스템 개선
- 비상동원명령 후 30분 이내 응소 등 의용소방대원의 효과적 지원

○ (**산불**) 신고접수 후 헬기 **30분 이내** 초기 대응
- 산림청 헬기 출동을 위한 보고체계 개선(신고 접수 → 출동)

○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접수 후 **2시간 이내** 전문가 현장 투입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별로 전문가 인력풀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 (**도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가능 지속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간 긴급복구자원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긴급복구시스템 구축 및 예비시스템 구비

□ 실행계획

○ (1분기) 관계기관* 회의 개최, 「골든타임제」 확정 협의(부처별 목표치 포함)

* 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청 등

-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홍보 강화, 의용소방대원 응소(30분 이내) 근거규정 마련(소방방재청)

○ (2~3분기) 목표치 달성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 분석 및 후속조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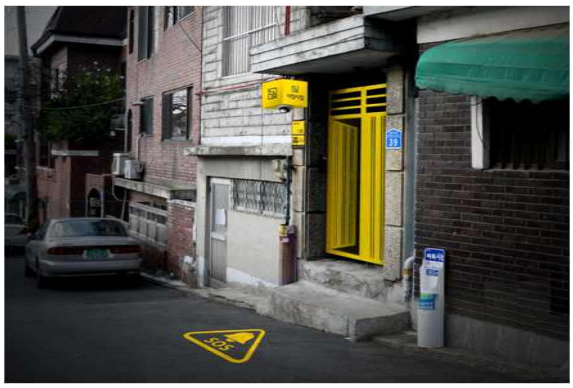
○ (4분기) 목표치 달성 추진상황 점검, 부처별 종합 평가

참고 안전한 우리 동네 「안심마을」 추진

□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 마을 단위로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민·관협업 모델 구축

○ 주민 스스로 안전 위해요인 발굴 및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





< 안전 지킴이집 >



⇨



< 보도개설,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



⇨



< 밤길 범죄예방 순찰, 골목길 시설점검 >

3 근원적 안전위협요인 제거

◇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원인 분석 및 해결대책 강구

□ 근원적 분석과 선제적 점검으로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

○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구성된「재난원인 조사단」본격 운영

- 사고원인 및 대응과정을 철저히 조사
- 조사결과 DB를 구축하고, 재발방지 및 사전 예방에 적극 활용

○「재난원인 조사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개선

○ 현행 매뉴얼을 촘촘하게 정비, 예방중심의 새로운 매뉴얼 체계 정립

□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확대

○ 귀달린 CCTV와 같은「지능형 CCTV」를 확대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대응능력 제고

○ 위성, SNS 등 분석,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스마트빅보드」고도화

- 일반국민도 볼 수 있게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을 선정, 시범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지자체-경찰서-교육청 등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상시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

- '14년 28개 추가 구축, '1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목표

※ 전용회선 활용, 관제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우려 최소화

□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주변 안전위협 요인 제거

○ 쪽방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염·동파 등 위협요소에 대한 예방적 점검 강화

○ 서민 주거 밀집지역의 배수로, 비탈면 등 위험시설 정비

○ 야광조끼 보급 등 폐지 줍는 노인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

참고 똑똑한 현장 모니터링 「지능형 CCTV」

□ 이상음원 자동감지 서비스

○ CCTV 주변의 차량충돌음, 비명 등 이상음원 자동감지·분석으로 폭력, 도난, 파괴 등 이상 상황 판별



□ 어린이 안전 위해 행동 자동감지 서비스

○ 학교주변, 통학로, 공원 등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 위험한 횡단, 싸움, 추돌 등 문제상황을 자동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신속 전달



4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

◇ 사회 구석구석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규정과 절차 준수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안전문화운동 강력 추진

□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 반드시 착용하기(3必着) 캠페인 대대적 실시

※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사망률 3.4배 증가('12년)
(안전모)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41%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발생('12년)
(안전조끼) 태안 청소년캠프('13.7)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5명 사망
여수 선박 화재·침몰('13.8)시 구명조끼 착용 승선원 19명 전원 구조

○ '신호위반, 꼬리물기, 정지선 준수'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 민간단체 · 기업과의 협력활동 강화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추진

- 생활안전 사례 온라인 홍보(포털업체), 쪽방촌 CCTV·가로등 확충(통신업체), 취약지역 무상의료서비스 제공(병원) 등

○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안전캘린더를 제작,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합동 캠페인 전국적 전개

※ 2·3월 개학기·어린이 안전, 4·10월 행락철 교통안전, 11·12월 성폭력 추방 등

○ 안전 강조기간 설정·운영(5월 어린이 안전주간, 11월 안전문화 강조주간)

□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각종 불법 물건을 일소

○ 유통책 단속, 처벌근거 법제화 등으로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차량) 근절

○ 신분증 온라인 진위확인서비스 확대(주민등록증 외 5종 추가)

※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

○ 불법물건 제보, 스마트폰·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 공익신고 활성화

5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 국지도발 등 안보위협 사태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대비태세 강화

□ 서해5도 등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스템 및 주민보호계획 보강

○ 경보시설 46개소 추가 설치(서해5도 16개소, 접경지역 30개소)

※ 특교세 지원(740백만원), 현재 장비 제작중(서해5도지역 2월까지 설치 완료)

○ 현지상황에 맞는 주민대피·이동·수용·구호계획을 점검·보완

□ 위기관리상황실 운영 준비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

○ 위기대응반 불시 소집, 팀별·개인별 세부조치사항 점검 등 훈련 실시

※ (상황예상시) 초동조치 Ⅰ단계 위기대응반(비상대비기획국장 등 11명) 운영
(상황발생시) 초동조치 Ⅱ단계 위기대응반(안전관리본부장 등 23명) 운영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 정비 등

□ 위기관리매뉴얼 보완 및 교육 강화

○ 위기경보별 조치, 세부행동지침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매뉴얼 보완

* 연혁 : 제정('11.6.21), 개정(1차 : '12.2.12, 2차 : '12.12.5)

○ 위기대응반 등 공무원 대상 위기관리 교육 확대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활성화

○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대피소 위치 찾기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책자·리플릿·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유능한 정부 분야 】

정부3.0,
기초적인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여
성과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1 공공정보 전면 공개 (국정과제 134)

2 맞춤형 서비스 정착 (국정과제 134)

3 세계 1위 전자정부 (국정과제 133, 134, 135)

4 공직사회 정상화 (국정과제 98, 138)

5 정부청사의 공간적 거리 극복 (국정과제 135)

1 국민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적극 지원

□ 정보공개 실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정보공개의 품질, 공개 방법, 수요자 편의성 등 반복적·집중적 점검

○ 일자리, 복지, 재정 등 국민 관심분야는 상세하고 알기 쉽게 공개

□ 사전 정보공개의 대폭 확대 및 방법 개선

○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바로 공개되는 원문정보 사전공개 본격 시행

※ ('13년) 청구 공개 31만건 → ('14년) 3.8억 건 → ('15년) 5.1억 건 → ('16년) 6.1억 건

○ 기관별 사전 정보공표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 제공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공간·기상·교통·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 개방률 : ('13.10월) 16% → ('14년) 36% → ('17년) 60%

※ 오픈API 25종 개발('14년) : 사회복지시설정보, 무역 및 내국 신용장 DB 등

○ 유망기업 30개를 선정,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 표준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기상법·통계법 등 데이터활용 제약 법령 상반기 중 개정, 창업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 공개를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협업하는 민관 협치 강화

○ 온라인 협업공간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활용 확대

○ 민관 협치 수준 측정을 위한 가칭 '민관 협치 활성화 지수' 개발

참고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

○ **15대 전략분야** 중심 **유망기업**(30개) **선정***,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사업화 집중 지원

* 15대 전략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유망업종)**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기상·문화정보를 융합한 감성 마케팅 등 인기업종 발굴*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수요 조사 실시('14.3월)

- **(기업선정)** 분야별 공공데이터 활용 1인 기업 및 중소기업 등 선정

  ※ 국가오픈데이터포럼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전문가 심의

- **(사업지원)** '산업생태계 협의체'를 구성,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및 인프라 지원(SW, HW, 네트워크) 등 대기업 협력 강화

  * 유망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간 MOU 체결('14.3월) : 한국정보화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 **(기업인증)**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인증*

  * 공공데이터 법제도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 인증기준 등 제도 마련('14.7월)

○ **단계별 지원체계**

단계 / 구분	① 인식 확산	② 창업 준비	③ 창업 초기	④ 사업 성장
대상	일반인/학생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중견기업 성공창업자
방향	관심 유발	사업화 유도	자립기반 지원	성공기반 지원
지원	• 창업교육 • 성공 사례 전파	• 창업교육, 기술지원 • 자금지원(엔젤투자, VC) • 공간지원	• 멘토링, 컨설팅 • 자금지원, 커뮤니티 • 유망기업 인증	• 판로 지원 • 제도 / 법률
효과	▸ 아이디어 도출 ▸ 창업여건 인식	▸ 사업기회 탐색 ▸ 경험축적	▸ 아이디어 사업화실현 ▸ 자금 및 기술 확보	▸ 사업역량 강화 ▸ 매출 확대

2 한번에 받는 맞춤형 서비스 정착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운영과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 개개인의 수요를 존중하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문제해결형 협업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고용·복지·문화·창조경제 등 흩어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제공

- 기본적으로 고용·복지는 통합, 문화·창조경제는 지자체 여건별로 연계

※ ('14 상반기) 선도 지자체 10곳 선정·구축 → ('14 하반기) 전국 확산

○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및 인력 전환·재배치

○ 기관 간 인사교류 '13년 대비 2배 확대 (690 → 1,325명)

○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범부처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 74개 행정서비스 영역 중, 취업정보·식품안전정보 등 우선 실시

- 전자정부지원사업에 통합예산 배정, 시스템개발부터 사전연계·표준화

□ 신청이 없어도 '미리 알아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목록 통합 제공

- 약 17,000여개 수혜성 공공서비스를 임산부, 농어민 등 정책고객별로 유형화하여 안내·신청하는 통합시스템 시범 구축('14.12월)

○ 건강, 연금, 자동차 등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20여 종)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확대

○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발굴·추진

※ (예시) 시·청각 장애인 민원방문시 수화·통역 및 음성변환 서비스 지원(안행부,권익위)

○ 단계별 원스톱 지원, 전담창구 확대 등 창업·기업 서비스 강화

※ 中企지원사업 이력 관리를 위한 「中企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중기청)
전 시군구 50% 이상을 목표로 '허가민원 전담창구' 추가 확대(안행부, 지자체)

참고 남양주「고용-복지 종합센터」사례

◇ 현장 중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허무는 조직 진단 및 협업형 업무모델 정립

○ (추진배경) 고용·복지 서비스를 기관별로 분산 제공함에 따라, 국민 불편 및 기관별 예산상 비효율 등의 문제 발생

- 흩어진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센터·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들을 국민들이 각각 방문해야 하는 비용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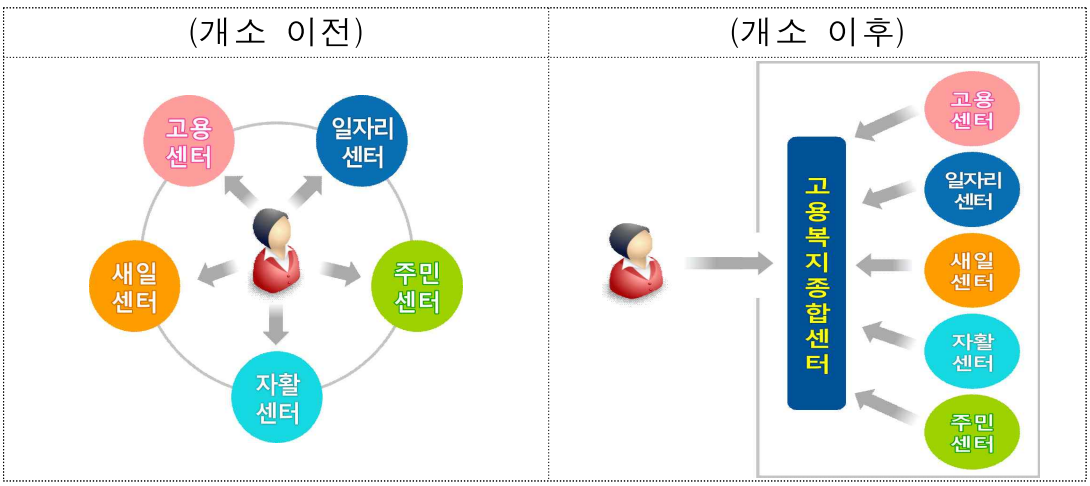
○ (추진경과)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 구성, 현장방문 및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고용-복지 종합센터' 체계 마련

- 일자리 지원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협업 제고

- 중복·공통업무는 조정·통합, 각 기관 고유기능은 유지·특화

※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남양주시), 새일센터(여가부), 지역자활센터(복지부), 복지지원팀(남양주시) 등이 참여

<종합센터 개소 전후 비교>



○ (효과) 기관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 중심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전달 및 과제 해결형 협업조직의 성공사례 창출

- 개인별 통합사례 관리, 취업박람회 등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 제고, 민원인 편의 대폭 개선

※ 센터 개소 후 일일 평균 400여명 방문

3 한 발 앞서가는 세계 1위 전자정부 실현

◇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언제 어디서나 과학적으로 일하는 전자정부 환경을 마련

□ 개인 PC에서 공유·협업의 클라우드 업무환경으로 전환

○ 전자결재·인사 등 공통업무시스템부터 대폭 전환, 업무·정책 지식을 통합·축적하여 기관 간 공유 및 공동작업 가능하도록 지원

○ 개방형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독자적 기술 확보 및 IT산업 성장계기 마련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능동적·과학적 정책관리 촉진

○ 정책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 정책수요 예측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및 선제적 행정 지원

○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검토

※ 現 정보자원의 위치·HW 통합 수준 → 클라우드 기반 SW·서비스통합으로 발전

□ 세계 1위의 전자정부 등 행정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

○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정부3.0 등 행정한류 대표 컨텐츠 구축

※ 전자정부 수출액 : ('10년) 1억 5,592만불 → ('11년) 2억 3,771만불
→ ('12년) 3억 4,212만불 → ('13년) 4억 1,928만불

○ 국제회의·행사를 성공 개최하여 행정한류 확산 계기로 활용

※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4월), UN 공공행정포럼(6월),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9월) 등

○ 사업 모델 수출, 전문인력 파견, 외국 공무원 연수 등과 연계

4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변화된 행정환경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제도와 관행 개선
◇ 봉사문화 확산·소수자 배려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성과를 우선하고 능력을 존중하는 인사확립

○ 국정과제 우수자 '올해의 공무원' 선발 및 특별승진·승급 등 우대

※ 「공무원임용령」 개정('14.1월) → 훈령제정('14.2월) → 올해의 공무원 시상('14.10월)

○ 부처 특성에 맞는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및 과장급 공모직위 확대(5→10%)

○ 직위·직렬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직관리로 공직 전문성 제고

※ 전부처 직위유형 분석('13년)→법령 정비('14.1월)→시범운영('14년)→전면도입('15년)

○ 장기재직 공무원 자기개발 위한 '(가칭)자기주도 연수휴직' 도입 검토

□ 배려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직 구현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대체인력 활성화 등 여성 경력단절 방지 지원

○ 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확대

○ 의사자(義死者) 유족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무원 채용 가점 도입

○ 재능나눔 활성화 및 봉사동호회 지원, 퇴직공무원 봉사 참여 확대 등

□ 비리와 부정에 대해 엄격한 공직사회

○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직위해제 처분 및 보수 감액 지급 추진

○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청백-e 시스템' 확산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 지원

5 정부청사의 공간적 거리를 디지털 행정으로 극복

◇ 정부청사의 공간적 분산을 ICT를 활용하여 극복하고, 원격·모바일 행정환경에 적합한 업무방식과 시스템, 행정문화 정착

□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강력 추진

○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 국정회의체의 영상회의 원칙적 시행

○ 영상회의 이용대상 확대(135개→200여 개) 및 의무 개최비율 상향(30%→50%)

○ 회의소집이 많은 종합 조정부처부터 솔선하여 영상회의 활용

- 업무협의 등 소규모 회의는 출장 대신 PC 영상회의 활용

○ 원격강의시스템 활용 확대 등 디지털 행정시스템 이용 교육 활성화

□ 원격 · 모바일 행정시스템 고도화

○ 청사 및 부처별 영상회의실 확대 설치 및 상호 운용성 개선

- '14년 말까지 중앙 및 지자체 영상회의실(500여개)이 연계되도록 조치

○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출장형 스마트워크 센터 추가 설치(5개소→7개소)

○ 원거리 기관 간 소통을 위한「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고도화

- 개인PC 간은 물론 공용 영상회의실과 연계, 원격회의, 협업과제 등 처리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시스템으로 출장·이동 공간 자체가 오피스가 되도록 발전

※ 이용환경, 보안성 등을 고려, 메모보고·일정관리 → 결재로 단계적 기능 확대

□ 차질 없는 세종청사 3단계 이전 추진

○ 6개 기관 이전 대비 3단계 청사 적기 준공('14.11월) 추진

- 공정률 52%로 정상 추진 중('14.1월말 기준), 금년 내 이전 마무리

○ 1,2단계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준비 이행 및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참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

◇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면보고나 출장 없이도 공무원 개인 PC에서 영상회의(보고)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부처 간 소통강화를 위한 **'통합커뮤니케이션(UC) 메신저'** 도입

- 개인 PC에서 기관내, 기관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

※ (PC영상회의) 동시사용 1,000명, 최대 60명까지 화면에 표출 / (메신저) 중앙부처 전 공무원 메시지 알림 및 실시간 SMS 통보

○ 협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마련

- 중요 시책, 다부처 과제 등의 공동 실적관리 및 보고서 공동 작성, 일정 및 진도관리 지원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제공

-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기관간 메모보고, 협업현황 등 관리

※ 이용환경, 보안 등을 고려하여 결재, 전자우편 등 단계적 기능 확대

< 참고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개념도 >



【 성숙한 자치 분야 】

민선6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1 책임성·투명성 강화 (국정과제 104)

2 권한·자율성 확대 (국정과제 104, 105)

3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국정과제 53, 105)

4 국정의 동반자 역할 지원 (국정과제 44, 105, 138,)

1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 지출 및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조직·인사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및 지방의원의 윤리성 강화

□ 주민서비스 중단 예방을 위한 파산제도 도입 추진

○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제고와 재정기능 정지사태 예방

○ 파산 자치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회생 방법 마련(공론화)

- 행정기구·정원 감축, 지방채 발행 제한 등 회생특례 규정

□ 지출·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

-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자치단체별로 부채관리관 지정·운영
-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시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반영

○ 대규모 지방재정사업*과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결산검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지방회계법 제정)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 부채과다 공기업을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채발행기준 엄격 적용

*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분기별로 부채감축 현황을 분석·공개 의무화

○ 사업별 구분회계('15년), 연결재무제표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16년)

○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중간관리자 직위에 개방형임용제 도입

○ 불합리한 복리후생 개선, 노사간 이면협약 근절,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 엄격 적용

○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회계, 계약 등 운영기준 마련, 경영평가 의무화

□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

○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인 「주민관심 핵심정보·지표」 개발 및 공개

※ (예시) 화재신고 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단체장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의정비 등

- 계약·조직정보 공개 의무화, 하도급 계약 등 공개범위 확대

- 매년 실시되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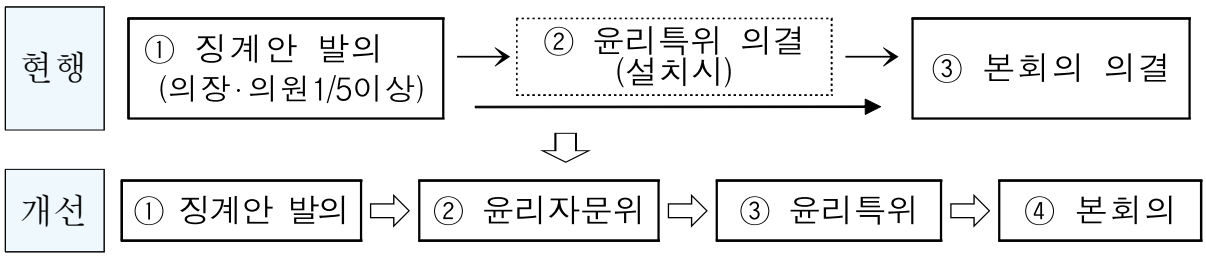
※ ('13년) 9개 분야별 등급 공개 → ('14년) 36개 시책 등급 공개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구요건(청구권자의 10~20% 서명)을 강화하고, 개표요건(투표권자 1/3이상 투표) 완화 또는 폐지

□ 지방의원 윤리제도 강화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 지방 조직·인사운영 및 자체감사 책임성 확보

○ 조직분석·진단 및 컨설팅 강화, 비효율적 조직운영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페널티 부여

※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칭) 「조직분석·진단센터」 설치 추진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의견 수렴을 통해 3개월 이내의 퇴직준비휴가 또는 사회적응 훈련 등 대안 제시

○ 「감사위원회」 등 자체감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2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따른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인력 운영

○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 현실화 ('14.6월)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실·국 설치기준 조정
-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조정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 조정

○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 도입 ('14.2월)

*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 부여

□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검토절차를 도입하여 조례로 정해야할 사무범위 확대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부여

< 현 행 >

직종	임용권자
일반직	단체장
임기제·별정·舊기능직	의회 사무처장

⇨

< 변 경 >

직종		임용권자
광역	全 직종	의장 ※ 일반직 채용, 징계권 제외
기초	일반직	단체장
	임기제·별정·舊기능직	의장

○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 강화 등 전문성 제고

□ 지방이 체감하는 확실한 지방분권 추진

○ 국가와 지방이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의 재배분 추진

- 새로운 국가·지방사무 재배분 기준에 따라 4만5천여건의 법령상 사무 총조사 및 사무 재배분 ('14.2월)
- 지방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양사무 등 결정 ('14.5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례 확대

- 대도시 행정수행에 필요한 핵심사무에 대하여 추가 특례 부여
  ※ 舊체제개편위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도정비·하수도종합계획 협의권 등 7개 발굴
-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소방 특례 부여방안 검토

○ 지자체 공무원 직급·기관명칭에서 '지방' 삭제, 차별적 용어 개선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일반·교육자치 연계,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핵심 분권과제 추진

□ 과세제도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지자체의 자체 세입관리 권한 강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속 축소 ('12년 21.8%→ '17년 15%)
-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3년 130종 연계완료, '14년 54종 신규연계)
  ** 지방세징수법 제정 추진,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14.8.7)

○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및 정액세율 개선

- 지역간 격차가 크고 장기간 미조정된 지방세율 개선
- 지역의 부존자원, 지자체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 확대
  * (예) 발전, 골재채취, 해저자원, 심층수, 폐기물, LNG시설 등

○ 행정처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각종 요금 및 수수료 현실화

○ 지방계약 발주시 인지세 부과에서 지자체 수입증지로 전환

3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동네규제 완화, 특성화된 발전전략 추진 및 지역별 맞춤형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동네규제 완화

○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규제 및 기업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애로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 해당 규제(조례) 기준을 지도에 색으로 표시

○ 기업 입장에서 지역별 규제 환경, 투자유치 등 경제성과를 평가한 「기업활력지수」 측정·공표 ('14년 광역, '15년 전 지자체)

○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하여 현장과 수요자 관점의 규제 적극 발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디지털 광고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광고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 지역별 특화 야시장* 개발, 시·군의 중심상가 재디자인, 시설개선, 컨텐츠 제고, 각종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재활성화

* 부산 깡통시장, 전주 남부시장 등을 비롯 5개 전통시장 야시장 선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특화자원(향토자원, 전통기술 등)을 활용한 특화마을기업* 육성 및 '대기업(중견기업)과 마을기업 자매결연' 등 판로 촉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술기반형, 유통형, 쪽방촌, 도시형 마을기업 등

○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4만개) 추진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 지자체(작업장 마련·임금 지급), 지역기업(일감제공·기술교육·채용), 취약계층(사업 참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 사업장 확대 운영

참고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특화자원(특산물, 전통기술 등)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등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

- (생산적 일자리 추진) 3대 유형, 13개사업 → 3대 유형, 16개 대상사업으로 개편, 일자리 사업 생산성 강화

<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사례 >

(경기 안양)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단



- 사업기간 : '13.3월~11월, 1일 참여인원 5명
- 버려진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통나무 의자, 계단목 등 주민편의시설 제작
- '13년 통나무 의자 140개(5,600만원 정도, 개당 40만원 환산) 등을 제작하여 등산로 등에 설치
- 사업장 예산 2,800만원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충북 증평) 폐현수막 재활용 녹색마을만들기 사업단



- 사업기간 : '13.3월~11월, 1일 참여인원 5명
- 수거된 불법현수막을 가공하여 마대, 시장바구니 등 제작
-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마대를 낙엽수거용으로 활용(15,000매)

⇒ 약 27백만원의 예산절감(쓰레기봉투 1리터당 1,800원 기준)

- (지속적 일자리 연계) 중소기업 취업지원 강화,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 일자리로 연계·발전

▸ 지자체(공동작업장 마련, 임금지급) + 지역기업(일감 제공 및 기술교육) + 취약계층(사업 참여)이 공동작업장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사례 >



① 기업연계형 : 부산 해운대

-해물 다시마 팩포장, 악기 부품조립 등 공동작업장 운영

-수익창출 적립('12년 22명, 50백만원 / '13년 26명, 28백만원)

② 주민자율형 : 경기 안양

-퀼트 생활용품 제작단(10명), 사랑의 문패 제작사업단(13명)

4 민선 6기 출범과 국정 동반자 역할 지원

◇ 민선 6기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을 통해 국정의 원활한 추진 지원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성공적 출범 지원

○ 6·4 지방선거의 공정·투명한 관리 및 차질없는 법정 선거사무 수행

○ 시·도지사 간담회, 시장·군수·구청장「국정과제 설명회」개최

○ 초선 단체장·지방의원 리더십 교육 및 직무수행 가이드 북 발간 등

□ 중앙과 지방간 소통 · 협력 강화

○ 지역단위 국가-지방기관간 협업강화를 위해 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간「(가칭) 정책협력회의」설치·운영

○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구성 ※ 민선 6기 출범 이후 새로운 여건에서 법 제정 추진

○ 지방 중심의 대한민국 제2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10월)

□ 복지중심의 동(洞) 기능개편

○ 인구 50만 이상 일반구 미설치 도시를 대상으로 대(大)동제 도입, 일반구 설치에 따른 비효율 방지 및 일선 복지기능 강화

○ 민원·복지·자치 관련 기능분석을 거쳐 복지중심 개편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지역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제정 추진 ('14년 하반기)

○ 복합이용공간*을 활용한 취약계층 거주지「희망 공동체」만들기 사업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주민소통·휴식·문화공간, 사회복지시설, 수익사업 시설(공동작업장 등)

○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 활성화

※ 조정기구, 조정기준 및 절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참고)

참고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 우리의 성공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단순한 물적 인프라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실질적 자립역량을 제고

- '09년부터 현지마을 지도자·공무원 대상 초청연수(약1,000명)와 개도국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 중

※ '09년 이후 미얀마 등 약 20여개국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

<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성과(사례) >

새마을 초청연수사업 ⇨ 주민 자립의식 개혁



▸ (**몽골**) 교육 이수자들이 새마을회(약 2,500명 규모)를 설립
⇒ 식목의 날 법정화와 그린 몽골리아 사업 추진에 주도적 역할

▸ (**라오스**) 주민총회에서 선발된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공동농장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전개, 자신감 고취
⇒ ('08년) 가구소득 연 1,000불 → ('12년) 2~3,000불

시범마을 조성사업 ⇨ 가시적 소득 증가



▸ (**탄자니아**) 농지개간과 기술보급으로 현지 주요 식량작물인 카사바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
⇒ 자급율 : 20%→100%, 생산량의 2/3 판매로 신규 소득 창출

▸ (**우간다**) 시범마을의 가시적 성과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업이 인근 10여개 마을로 확산, 현지정부의 관심 유도

○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개도국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국제적 소통의 장(場) 마련

<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추진 >

▸ 일시·장소 : '14.4.21~24,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지자체
▸ 참석 : 개도국 정부인사 및 새마을지도자, 국제개발전문가, 유학생 등 약 800여명
▸ 주요 내용 : 사례 공유 세미나, 지구촌 새마을운동 선언문 발표, 현장 견학 등

- 현지 새마을 지도자의 전문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자격제 신설·운영
- 부처별 사업간 연계·통합,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대폭 강화

Ⅳ. 주요 정책 현안

1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공직부문 내 비정상적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구현의 토대를 마련
◇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바로 잡아 합리적·효율적 경영 도모

□ 공직 내 비정상적 ·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공직부문 정상화 과제」 39건을 선정하여 개선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 타파(7건)

※ (사례)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불합리한 공로연수제도 개선, 부당한 시간외 수당 수령행태 개선 등

- 비효율·불합리 제도 시정(23건), 법과 원칙의 공직문화 확립 등(9건)

※ (사례) 지방에 대한 차별적 용어 개선, 비합법적인 공무원 노사행태 개선,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개선 등

○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으로 선도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꾸준한 동력 확보를 위한 내부 점검체계 마련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 부채 감축, 경영평가 강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도모

○ 재무상태, 경영손익 등을 고려한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 지정, 부채감축목표제 실시 등 부채 구조조정 추진

○ 성과 중심 경영평가 강화를 위한 재무성과, 부채감축 등 평가지표 보강, 불합리한 복지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실시

○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등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확대

○ 안행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경영공시 확대 등도 함께 추진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13.12월 발표)」 이행 철저

2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

◇ '14.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민선 6기 출범을 지원

□ 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14. 6. 4.(수), 06:00 ~ 18:00**

※ 예비후보 등록(2.4), 후보 등록(5.15~16), 선거운동 개시(5.22), 사전투표(5.30~31)

○ 실시대상 :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등 3,952명

□ 주요 내용

○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 안행부 공명선거대책단('13.12월~) 및 공명선거지원상황실(2~6월) 운영
-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 등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각종회의·교육시 선거중립 강조, 공무원 행위기준 책자 발간·배포
- 줄서기, 공직사회 편가르기, 금품수수 등 고질적 선거병폐 차단

※ 안전행정부·시도 합동 공직기강 특별감찰단 편성 운영('14.3~6월)

○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수행**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처리 등 지자체 추진 지원
- 투·개표사무원 확보, 투·개표소 안전관리 대책 마련

○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 적극 전개

□ 향후 계획

○ 공명 지방선거 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지침 시달(2월)

○ 전국선거담당공무원 교육(3~4월) 및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4~5월)

3 개인정보보호 강화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개인정보 유통경로 투명화,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관리 강화, 간편한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도 개선

○ 개인정보 관련 법률간 불일치·모순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각 법률간 제재수준 일관성 유지

※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 유출·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병원, 마트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 집중 점검 실시

○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처분 결과 공표 및 위반·처분 사례 전파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처분('14.8월 시행)

○ 공무원증 신분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기능(현금카드) 삭제 추진

□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 마련

○ 8월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 금융·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 정비 : 수집정보 폐기기간, 처벌규정 보완 등

○ 주민번호 대체 식별수단 활성화 및 다양한 근본대책 검토

○ 정부내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4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 국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도로명주소의 초기 정착

□ 추진 현황

○ **(공공)** 공적장부 전환이 완료되어 업무 전반에 사용 중

- 각 부처·시도별 상황실 운영 등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 운영('13.12.17~)

○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환경 조성, 기업 주소전환 지원

- 내비게이션·인터넷 검색 개선, 전 세대 대상 전면사용 안내문 배부
- 40개 선도기업 중 28개 기업이 주소전환 완료·활용 중

□ 향후 추진계획

○ **국민 불편사항 적극 개선 추진**

- 도로명에 동명칭·지명 등 지역의 역사·전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논의를 거쳐 변경 추진
- 훼손·멸실·미부착 안내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즉각 정비

○ **택배·내비게이션·인터넷쇼핑 등 생활 밀접분야 활용 여건 중점 조성**

- **(택배)** 원활한 배송 지원을 위해 안내도 보급, 현장 애로사항 청취,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새로운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 **(내비게이션)**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안내, 업그레이드하기 캠페인, 검색 기능 지속 개선
- **(인터넷쇼핑)** 회원가입·배송지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지원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민간분야 활용도 제고**

- 배달업계 안내도 보급, 취약계층 방문설명 등 맞춤형 홍보
- 기업 및 각종 모임·단체 주소전환 컨설팅 및 지원

Ⅴ. 추진 일정

1 추진 지표

분야	핵심 지표		2013년	2014년	2017년
안전한 사회	4대 사회악 감축목표	성폭력 미검률	11.1%	10.6%	9.1%
		가정폭력 재범률	11.8%	11.4%	10.4%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2.1%	2.0%	1.7%
		식품안전 체감지수	72.2%	75%	90%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명)		4.3명('12년)	3명대	2명대
	화재시 5분 이내 출동률		58%	62%	74%
유능한 정부	원문정보 사전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31만 건 / 5천 종	약 3.8억 건 / 7.6천 종	약 7억 건 / 12천 종
	민원24 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3개 서비스	15개 서비스	30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116개 (9%)	257개 (21%)	740개 (60%)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수		제도 도입	1천여명	4천여명
	기관간 인사교류		690명	1,325명	2,000명
	영상회의 지정회의 (의무 개최비율)		135개 (30%)	200개 (50%)	원격지간 모든 회의 (50%)
성숙한 자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21.8%('12년)	20%	15%
	지자체 채무액		27조('12년)	25조	20조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1,910명 ('12년 통계)	2,100명	2,200명
	마을기업 육성		1,162개	1,312개	1,700개
	전체 지방공무원 대비 복지담당공무원 비율		9.16% (26,577/290,066)	10.1% (29,773/294,827)	12.42%

2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1.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	
1-1. 어린이와 여성 안전정책 강화	
- 4대 사회악 추진실적 점검 및 안전체감도 모니터링 실시	연중
- 안심귀갓길 및 여성안심구역 추가 확대	3월
- 어린이 안전 강화대책 수립	4월
-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본격 시행	9월
1-2.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정착	
-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개선 공사	연중
- 골든타임제 분야별 목표치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4월~
- 소방차량 우선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12월
- 지역안전지수 공개	12월
1-3. 안전위협 요인의 근본적 해결	
-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2월~
- 지능형 CCTV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3월
- 신종 재난유형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10월
- CCTV 통합관제센터 28개소 추가 구축	12월
1-4.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책	
- 3필착 등 안전문화 캠페인	연중
- 3대 대포물건 단속결과 보고 및 대국민 공개	10월
- 안전문화대상 및 안문협 전국대회	11월
1-5. 비상 위기대응체계 철저 유지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연중
- 서해5도 경보단말 16개소 확충	2월
- 위기관리회의실 장비 점검 및 위기대응반 불시점검	3월
- 충무기본계획 수립	5월

추진과제	추진일정
2. 정부3.0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2-1. 국민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 정부3.0 지수 개발 및 공개	연중
- 정보공개 실태 점검 개선	연중
- 원문정보 공개 개시	3월
- 스타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간 MOU 체결	3월
2-2. 한번에 받는 맞춤형 서비스 정착	
-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 시범사업 추진	연중
-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연중
-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 추진	연중
-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추진	4~6월
2-3. 한 발 앞서가는 세계 1위 전자정부 실현	
- 범부처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연중
- UN 공공행정 포럼 개최	6.23~26
- 클라우드 ISP 추진	8월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준비단 구성	12월
2-4. 정부청사의 공간적 거리를 디지털 행정으로 극복	
- 영상회의 활용 확대	연중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개선	연중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개통	3월
- 3단계 세종청사 준공 및 6개 기관 이전 완료	11~12월
2-5.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상반기(4~6월) 하반기(10~11월)
- 부처별 과장급 공모직위 5%→10% 확대 지정	9월
- 직위해제시 보수감액 기준안 마련	9월

추진과제	추진일정
3.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 정착	
3-1.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 건전화 대상 공기업 지정기준 마련	6월
-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확대	8월
- 파산제 도입방안 공론화 및 입법 추진	12월
- 주민소환제도 개선	12월
3-2.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 수립	2월
- 지자체 행정기구·직급기준 조정	6월
- 지방의회 기능 강화	12월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1차) 완료	12월
3-3.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시·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2월
-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6월
-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3월, 10월
- 옥외광고물 제도 개선	10월
3-4.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선6기 출범 지원	
- 6.4 지방선거 공정 관리	3월~6월
-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4.21~24
- 신임 시·도지사 간담회, 시장·군수·구청장 국정과제 설명회	10월
- 복지중심 지방행정 기능 개편방안 마련	10월

3 2014년 정부입법계획 (16개 법률안)

계	2014년 정부입법계획 (국회 제출 시기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	-	1	-	3	4	1	1	3	3	-	-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방공기업법 (일부)	○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지방직영기업 설립범위 확대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직영기업 정보처리 장치 정부지원 근거 마련 ○공사·공단 구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로부터 8개월
2	지방교부세법 (일부)	○지방교부세의 종류, 재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용어 삭제 ○보통교부세에 이양사업 보전재원을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에 교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법률 명칭, 목적 개정 및 법률 용어 정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등 도입 ○시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근거마련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등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0월 1일
4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발대상 지원대상도서 중 지원이 제한되는 도서범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1일
5	정부조직법 (일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부처 범위 제한을 완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일원화 등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로부터 3개월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위원회 설립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근거 명시 등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10월 1일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기관장 임기규정 제한 완화 ○기탁물품 중 금전 기부 허용 ○기본운영규정 개정절차 완화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로부터 3개월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새마을금고법 (일부)	○민법상 금치산자 등 폐지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등 정비 ○중앙회 감독관련 업무정지 처분시 정지기간 상한 설정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개정·공포 : 12월 1일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고도화 및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자치분권, 환경, 산업 등 특례부여 및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전직대통령 열람 시 사본제공 근거 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 훼손방지를 위한 보존처리 절차 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후 공개재분류 규정 신설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근거 마련 ○대통령기록물 이관연장 대상 기관 확대 ○대통령선물 및 행정박물 평가 및 폐기 절차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1	인감증명법 (일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에 따른 인감증명법상 재외국민인감대장 등 관련내용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동시 시행
12	국가공무원법 (일부)	○장기재직자 자기주도 연수휴직 도입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확대(1년→3년) ○의사상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법제처 제출 : 6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로부터 6개월
14	지방세기본법 (일부)	○지방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제도 마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5	지방세법 (일부)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정비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토론회 등에서 채택된 개선 필요과제 중심으로 입법 추진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14년 일몰예정인 감면 조항정비 추진 - 농업법인, 창업 중소 기업, 국가, 공사·공단, 기업 부설연구소 감면 등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참고] 주요정책 개념체계도

현장 중심의 체감형 안전 실천

전략	과제	성과	애로사항	대응책
어린이 여성 안전 확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국정과제)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14.1월)	• 위험인지능력이 낮아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놀이시설 · 통학차량 · 스쿨존 현장관리 강화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 연령별 · 활동공간별 대책 수립
	여성 · 주부 불안요인 해소 (국정과제)	• 성 · 학교 ·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감축목표 달성	• 30~50대 여성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낮음	• 원룸건물 담당 경찰 지정 및 방범인증제 도입 • 택배 검침 등 가정방문 서비스 대책 마련 • 4대 사회악 감축목표 재설정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난시 신속한 현장 대응 (국정과제)	• 소방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출동로 확보방안 마련('13.11월)	• 양보문화 부족, 불법주정차 등 긴급차량 신속 출동에 어려움	• 「골든타임제」실시 •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지자체 적극적 참여 촉진 (지시사항)	• 지자체 안전전담부서 설치	•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중앙–지방의 인식격차 존재	• 지자체 평가지표 보강, 인센티브 확대 • 안심마을, 생활안전지도 본격 확산 • 「지자체 안전지수」 공개 및 맞춤형 컨설팅
근원적 안전위협 요인 제거	스마트 재난 · 안전관리 확대 (국정과제)	• '귀달린 CCTV' 지능형 관제 도입 • '스마트 빅보드' 개발	• 도입 · 개발 단계로 재난 안전 영역 전반에 적용되지 못한 상황	•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 확대 • '스마트 빅보드' 고도화
	안전사고 재발 방지 (국정과제)	• 예방중심의 '국민안전 종합대책' 마련('13.5월)	• 근본적 원인 분석과 과학적 관리를 위한 수단 미흡	• 재난원인조사단 본격 운영, 사고원인 철저 조사 • 「국가안전지수」 개발
안전문화 정착	기초 안전수칙 준수운동 전개 (국정과제)	• 안전문화운동중앙협의회 출범 ('13.5월), 안전실천 캠페인 실시	• 캠페인 등이 단발성 행사 위주로 진행	• '생명보호장비 착용 캠페인'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 하여 집중 전개
	각종 불법 물건 일소 (부처중점)	• 3대 대포물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13.12월)	•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이 범죄행위에 악용	• 처벌근거 법제화 등 3대 대포물건 근절 •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확대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전략	과제	성과	애로사항	대응책
공공정보 전면공개	정보공개 확대 (국정과제)	• 사진정보공표 확대(85천건) • 정보공개법 개정('13.11월)	•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부족	• 정보공개 실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원문정보공개 본격 시행
	공공데이터 개방 (국정과제)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5천종) • 공공데이터법 제정('13.10월)	• 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 및 산업적 성과 창출 필요	•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 민간수요를 반영하는 채널 상시화
맞춤형 서비스 정착	문제해결형 협업체계 확산 (국정과제)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6개)	• 성공사례의 범정부적인 확산이 필요한 시점	•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10개) 중심 우선 구축
	원스톱 서비스 모델 본격 추진 (국정과제)	• 남양주 고용 · 복지 종합센터 • 민원 24 생활정보 통합 제공	• 단편적 과제 중심 추진으로 전서비스 영역 확산 부족	• 원스톱 서비스 모델 전국 확산 (문화 · 창조경제 연계)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
세계1위 전자정부	클라우드 · 빅데이터 기반 구축 (국정과제)	• 77개 정부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 97개 빅데이터 시범과제 발굴	•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속 전환 • 빅데이터 활용 · 분석으로 과학적 정책관리
	디지털 행정 확산 (지시사항)	• 영상회의실, 스마트워크 센터 등 지속 확충	• 대면 중심의 문화로 인해 온라인 협업 정착 부족	• 영상회의 의무대상 확대 및 개최 비율 상향 • 통합의사소통, 모바일 업무처리시스템 확대
	행정한류 확산 (부처중점)	• 전자정부 수출 확대(4억불) • UN공공행정포럼 유치	• 분야별 성과의 체계적 · 적극적 추진 여건 부족	• 새마을 운동, 전자정부, 정부3.0 등 정부혁신 우수 행정모델 확산
공직사회 정상화	공직 이기주의, 특혜성 제도 개선 (비정상 정상화)	• 공직부문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 · 제도 발굴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과 의식 잔존	•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적 과제 발굴 · 개선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전략	과제	성과	애로사항	대응책
책임성 투명성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국정과제)	• 투융자 심사 대상 확대 • 지자체 행정경비 기준 설정	• 근본적인 책임재정 확보와 서비스 중단 예방 필요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
	지방공기업 정상화 (비정상정상화)	•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 추진(12월)	• 일부 공기업의 부채과다와 불건전한 운영 사례 지속	• 통합 부채관리, 경영상황 공개 확대 • 임직원 책임성 강화,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주민통제제도 개선 (국정과제)	• 지방재정 공개 확대 (행사 · 축제 원가 등)	• 주민소환제도 등 기 운영중인 제도의 실효성 미흡	• 주민소환 요건 개선 • 지방의원 윤리제도 강화
권한 자율성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구 · 인력 운영 (국정과제)	• 안전 · 복지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 행정수요 대응, 기관간 협업에 어려운 조직 구조	• 일반구 구청장 · 기초부단체장 직급 조정 • 기준인건비제 도입
	자주재원 확충 (국정과제)	• 지방소비세 확대(5%→11%)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 미흡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속 축소 • 지역 부존자원 등에 대한 과세 확대
	의회역량 제고 (부처중점)	•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단체장에 대한 견제역할과 전문성 확보 미흡	• 의회 의장에 직원 인사권 부여 •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지역규제 개선 (지시사항)	•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	• 일선 현장의 소극적 행태 존재	• 「기업활력지수」 개발 활용 •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 제공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 진흥 (국정과제)	• 마을기업 육성 (787개→1,162개)	• 사업성이 미흡한 마을기업 존재 • 규제위주 옥외광고물 제도	• 마을기업 사업 다변화('14년 150개 추가설립) • 광고산업 진흥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제도 개선
공직사회 정상화	지방선거 관리 (지시사항)	• 재보궐 선거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 ('13년 2회)	• 음성적 지지 행위 등 불법 운동사례 잔존	• 특별감찰단 운영 등 철저한 감시체계 가동 • 줄서기, 음성적 지지 등 기강해이 강력 단속
	국정과제 협력 지원체계 마련 (국정과제)	• 복지 · 소방인력 확충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 국정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업 필요	• 시 · 군 · 구청장 당선자 국정설명회 • 복지인력 확충, 대도시 「대동제」 시범실시